

제24차

한 · 일 통계협력회의 결과보고서

(동 경 회 의)

2008. 6.

통 계 청

목 차

I. 회의결과
1. 회의개요
2. 회의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 회의결과
가. 일본통계 제도
나. 가계조사 개선방안
다. 2010 인구센서스(국세조사)
라. 일본 농수산통계
마. 아이치현 통계활동현황
II. 참고자료
1. 2005년 일본의 센서스 조사환경 결과분석
2. 2010 일본 국세조사 준비상황
III. 수집자료(별첨)
1. 통계국 업무개요
2. 가계조사 개요
3. 평성 16년 전국소비실태조사 개요
4. 가계소비상황조사 개요 및 조사표류
5. 가계조사 보고서류
6. 가계소비상황조사 매뉴얼 및 가계부
7. 2005년 농림업 센서스 조사표
8. 농산촌 지역조사표
9. 평성 20년 집락영농활동실태조사 개요
10. 면적조사 개요
11. 논벼 수확량 조사개요
12. 아이치현 통계과 개요

I. 회의결과

1. 회의개요

□ 기간 및 장소

- 기간 : '08.6.23(월) ~ 6.27(금)
- 장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아이치현 현민생활부 통계과

□ 회의주제

- 가계조사의 환경변화 대응방안
- 2010 인구센서스의 추진상황 및 개선방향
- 농수산물통계 제도정비 추진방안
- 지방자치단체 통계활동

□ 회의참가자

- 한국측 사회통계국장 김진규
 농어촌통계과 서기관 김남훈
 사회복지통계과 사무관 김신호
 인구조사과 주무관 정공선
- 일본측 통계정책관련 통계국장 카와사키 외 4명
 농림수산업성 통계부장 이와모토 외 2명
 아이치현 현민생활부장 시로타 외 7명

□ 세부일정

일시	일정	장소, 담당	
6.23(월)	09:25~11:25	○ 김포공항 → 하네다 공항 도착	OZ1025편
	15:30~15:50	○ 통계국장 면담 및 간부소개	통계국장실
	16:00~16:20	○ 통계국 업무소개	이지마 총무과
	16:30~16:50	○ 정책통괄관 인사	키타다 통계기획관리과장
	18:30~20:30	○ 통계국장 주최 환영회	통계국장외 6인
6.24(화)	10:00~11:40	○ 가계조사 개선방안 토의	오누키 소비통계과장
	12:00~13:00	○ 의견교환 간담회	
	14:00~15:20	○ 국세조사 추진상황	가와노 국세통계과 기획관
	15:30~16:20	○ 통계센터 이사장 인사 및 의견 교환	통계센터 이사장 실
	16:30~17:00	○ 총괄질의	통계국장 실
	19:00~21:00	○ 통계센터 이사장 주최 만찬	
6.25(수)	10:00~12:00	○ 농림수산 통계의 개선방안	농림수산성 長清 통계부장외 2인
	12:20~13:20	○ 의견교환 간담회	
	13:30~16:30	○ 도쿄 시내 시찰	
	17:20~19:02	○ 도쿄 → 나고야(아이치현)	
	20:00~21:30	○ 의견교환 간담회	
6.26(목)	10:00~12:00	○ 아이치현 청 방문, 통계활동 설명	아이치현 현민생활 부장 등
	12:00~13:00	○ 의견교환 간담회	
	14:00~16:00	○ 도요다 회관 및 조립공장 시찰	
	18:30~20:30	○ 통계국 주최 환송회	
5.19(토)	09:00~10:00	○ 나고야 시내 → 공항	
	12:00~	○ 나고야→인천공항	OZ121편

2. 회의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통계정책 및 일반현황

- 일본 통계국은 아국 통계법을 참고로 2007년 통계법을 개정, 분산형 통계제도 하에서 국가통계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
 - 통계위원회 설치, 과거 통계국장 하의 기준부장을 국장급 정책 통괄관으로 격상
 - 일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통계국 및 농림수산성 등의 지방통계 인력 감축을 추진 중
 - 특히 농림수산성 지방 통계인력은 2005년(4,132명)부터 2010년까지 2,200여명 수준으로 축소(▽1,900여명) 추진(1983년 8,464명)
 - ※ 통계조사 축소(32종→28종), 임시조사원에 의한 조사(11종), 우편 및 인터넷 조사(17종)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수산통계 제도 개혁 추진 중
 - 지방통계 인력의 감축으로 신규통계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거부
 - 최근 서비스산업동향조사 및 가계소비실태조사를 리서치회사에 Outsourcing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도 관리, 보안 등에서 미흡한 수준
- ➡ 전반적 통계정책의 방향이나 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노력은 양국이 유사**
- ➡ 일본의 국가 공식 통계 민간 위탁은 지방인력 감축 및 지자체 거부로 인한 대책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상이**

□ 주요 통계조사 관련

인구 Census

- 2005 국세조사(Census)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 Census에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 적용 가능성 검토 중

- 최근 실시한 시험조사에서 약 70% 이상의 우편조사 회수율
- 우편조사의 적용으로 조사원은 2005년(83만명)보다 10만명 이상 감축 가능하나, 조사표 내용 심사를 위한 예산 추가소요 예상
- 카와사키 통계국장은 등록센서스에 대하여 일본의 등록 상 인구와 상주인구의 큰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전통적 센서스를 선호하는 입장
- 아울러 센서스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의 1/10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비용 Census 의식을 느낄 수 없었음
- * 1인당 센서스 비용 : 미국 50,000원, 일본 6,000원 (한국 4,300원)
-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별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일치, 가구수와 주민등록 세대수와의 차이 보정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 필요**
- ➔ **일본도 우리처럼 4차 이상의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조사방법, 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검증하고 개선하고 있음**

가계조사

- 가계조사는 1953년 이래 실시되어온 오래된 통계조사이나, 최근 응답가구의 협조도 저하 및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어려움 가중
- 전자가계부, 인터넷조사, 모니터링 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 중
- 가계소비지수를 매월 작성하여 주요 경기지표로 활용하며 매월 말 통계국장이 각의 보고를 직접하고 일반에 공표
- 가계조사와 함께 노동력조사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 經常 3調査를 매월 각의에 보고
- 가계조사의 정도 보완을 위해 가계소비상황조사 및 5년 주기의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실시

- ➔ 우리의 가계조사는 일본보다 안정적이며, 특히 전자가계부의 도입은 일본에서 높은 관심 표명
- ➔ 일본이 검토 중인 모니터링 조사방법과 같은 것은 우리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사료

농수산통계조사

- 일본의 농수산통계는 농림수산성이 주관, 지방농정국의 통계 부서를 통하여 별도 실시
 - 최근 농수산통계 제도개혁 추진과 더불어 농업경영통계조사 및 논벼 생산량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를 임시조사원을 통해 추진
 - 통계조사 종류를 32종에서 28종으로 줄이고, 정규직원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Outsourcing 또는 우편조사, 임시조사원 채용 조사 등으로 개편
 - 원격탐사기법은 10년 전부터 연구 중이나 위성영상 구입비용이 조사원에 의한 조사비용보다 많이 소요되어 적용 보류
 - 2010 농림업 센서스는 규모이상의 경영체를 중심으로 하며, 조사항목을 대폭 줄임과 동시에, 소규모 농림가는 조사표 한 장으로 된 약식 조사표를 사용
- ➔ 우리도 26종의 농수산통계를 20종으로 폐지·통합하고 조사방법 변경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중이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 원격탐사기법은 우리의 경우 위성영상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
 - ➔ 우리의 2010 농림어업센서스도 조사항목의 간소화, 조사대상의 구분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에 따른 조사 및 집계, 자료이용 등과 관련한 대책 모색에 집중 필요

3. 회의결과

가. 일본 통계제도

-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등 각 부처별로 소관 통계 작성을 하는 **분산형 통계작성체제**
- 총무성 정책통괄관이 부처간 통계업무 조정
 - 통계업무 관련, 총무대신 자문을 위해 통계심의회를 구성, 운영
- 중앙부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조사는 지자체(도도부현)에 위탁하여 수행
 - * 농림수산성은 지방 농정국을 통해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농림업 센서스는 지자체를 통해 수행
- 각 **도도부현**은 중앙부처가 위탁한 통계업무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며,**
 - 도도부현의 정규 인력 및 조직은 총무성이 결정하고, 소요 예산을 총무성이 국고지원

□ 총무성 통계조직도

- '05.8. 통계조정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총무성 통계국 자체적으로 개혁 시행
 - 정책통괄관, 통계국, 통계연수소, 통계센터 4개 부서로 개편
- 통계관련 총무성대신 자문을 위한 통계심의회 운영
 - 통계심의회위원회를 내각부로 격상 추진(10월 추진 예정)

□ 총무성 통계조직별 기능

【정책통괄관】

- 기능
 - 정부통계전체의 제도설계(통계행정의 합리적 추진·종합조정)
 - 통계·통계제도의 발전·개선의 기본계획수립 및 입안
 - 통계조사의 심사·조정·기준 설정
 - 국제통계업무의 총괄
 - 통계심의회 사무국
- 조직 : 통계기획관리관, 통계심사관(3), 국제통계관리관

【통계국】

- 기능
 - 국가 기간통계 기획, 분석, 공표 등 통계기획입안·실시기능
 - 국세조사 등 국세관련 통계작성
 - 국·지방공공단체 위탁 통계작성
 - 통계정보의 이용촉진(정부통계의 종합창구 기능)
- 조직 : 통계국장, 통계조사부*, 총무과, 통계정보시스템과
 - * 5과 3관 2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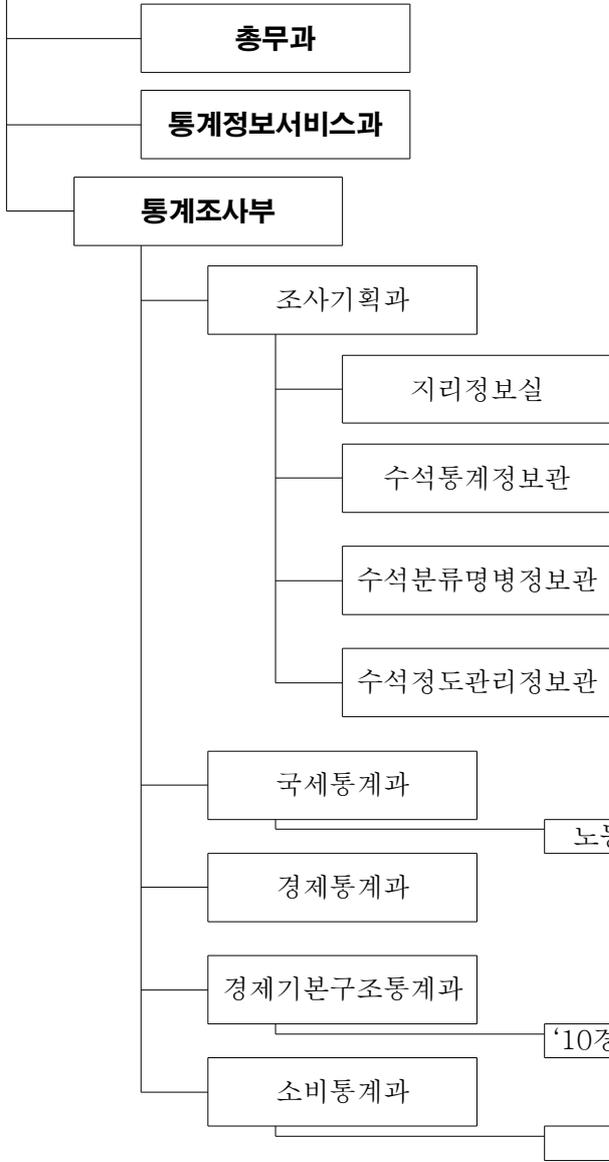
【통계센터】

- 기능 : 통계국 작성통계의 조사결과 집계, 정리 및 데이터 서비스
- 조직 : 독립재단법인이되, 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
 - 총무부(3개과 1실), 제표부(4개과 1실), 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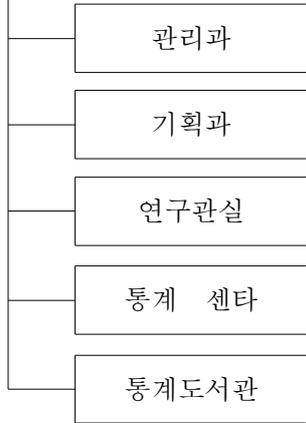
【통계연수소】

- 기능 : 공무원에 대한 통계 연수 및 이를 위한 연구, 통계데이터(도서 등) 작성
- 조직 : 연구인력 14명을 포함하여 약 70명

통 계 국



통계연수소



독립행정법인통계센터



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



□ 통계관련 제과제

【통계개혁】

- 통계법 개정
 - 공식통계의 체계적 정비, 통계 DB 이용 촉진 및 비밀보호, 통계위원설치 등
 - 2009년 4월 전면 시행 예정
- 공식통계의 체계적 정비
 - 중요한 통계를 기간(중심)통계로 자리매김(조사통계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행정)통계나 가공통계도 대상으로)
- 통계위원회의 설치(2007.10.)
 - 위원장 : 동경대 다케우치 교수
- 기본계획의 책정
 - 공적통계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각의에 의해 결정
 - 2009년 봄에 각의결정 예정 및 대략 5년마다 변경
- 통계 데이터의 이용촉진
 - order made(맞춤형)통계, 익명데이터의 제공 등

【통계국의 현안】

- 경제센서스의 실시준비
 - 본사에 대해 지사분도 일괄해서 조사업정(조사원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를 병행)

- 금년 4월에 2011년 경제센서스활동조사 준비를 위한 조직을 설치
- 통계데이터의 2차이용의 추진
 - 통계센터에 있어서 오더메이드 집계나 익명데이터제공에 관한 검토·준비
- 통계조사 등 업무의 최적화
 - 정부통계공동이용시스템의 운용(통계센터에 위탁)

나. 가계조사 개선방안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는 가계수지에 대하여 가계조사(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가계소비상황조사(Survey of Household Economy), 전국소비실태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등 3종의 조사 실시

(1) 가계조사

□ 연혁

- 1946년 지출부분만 조사, 1948년 소득조사, 1950년부터 양 조사를 통합한 가계조사 시작
- 1962년 조사대상을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 1999년 농림어가 포함 조사
- 2002년 1인가구 포함조사, 자산조사 포함(기존 가계자산조사는 폐지), 식료품 구입물량(중량 및 수량)을 기존 6개월간 매월에 서 연동표본 편입 첫 달에만 조사

□ 목적 및 이용

- 가계수지의 수준과 구조를 전체 및 각종 특성별로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추진에 활용
-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선정 및 가중치 산출 기준
- 가계부문의 경제동향, 개별 상품의 수요 등의 분석
 - 가계소비지수를 매월 작성하여 주요 경기지표로 활용하며 매월 말 통계국장이 각의보고를 직접하고 일반에 공표
 - 가계조사와 함께 노동력조사 및 소비자물가조사를 경상 3조사로 매월 각의에 보고

□ 표본추출

- 3단 층화추출: 168 지역-1,346 조사구-약 9,000조사가구
 - 응답거부시 30,000가구 내의 유사가구로 대체토록 하여 9,000가구의 응답자료 확보
 - 그러므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등의 과정이 없음
 - 평균적으로 3.4가구를 설득하여 한 응답가구 확보
- 가구별 조사기간은 6개월(1인가구는 3개월)이며 매월 1/6가구(약 1,600가구)씩 연동교체
 - 연동편입 첫 달의 응답결과는 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 등이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추정방법 적용 등은 없고 조사원의 노력을 독려
 - 아울러 추이 분석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1인 학생가구 제외, 기숙사 가구 포함
 - 1인 학생가구는 조사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부모로부터 송금 받아 이용하며, 문부성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외

- 응답부담 경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표본(경활표본 이용 등)은 이용하지 않음

□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표 유형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시기	기업자
가구표	가구특성	전가구	조사개시전	면접조사
가계부	수입	근로자 및 무직가구	매월	조사가구
	지출	전가구		
연간수입조사표	연간수입	전가구	연동 첫달 후반	조사가구
가계자산조사표	저축 및 부채	전가구 (1인 제외)	연동 3개월째	조사가구

□ 조사체계

- 총무성 통계국에서 조사기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
 - 일본은 지방 통계조사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음
 - 코딩업무 등을 분산시켜 집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15일 주기로 가계부 회수
 - 업무부담이 인구센서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과중
- 총무성 통계국에서 항목분류(코딩) 등을 거쳐 집계 및 공표

□ 공표

- 2인이상 가구 가계수지: 월별, 분기별 및 연간 공표
 - 월 및 분기별: 소득 및 지출추이, 월별 계절조정지수, 항목별, 재별, 선택/기본적 지출별 등
 - 연간: 63개 지역(10개 지방, 4개 대도시 및 49개 도도부현청 소재지)별, 연령대별, 연간수입 5분위별 등의 가계수지
 - 도도부현 청소재지(96표본가구) 등의 경우 표본규모가 작아서 표본오차가 큰 문제가 있지만 공표

- 이용자가 분석시 정도제고를 위하여 수년간 평균치, 인근 지역과 통합추정치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
- 1인 가구 및 전체가구 가계수지: 분기별 및 연간 공표
- 가계자산: 분기별 및 연간 공표

□ 조사여건 악화 및 개선노력

- 최근 가구의 협조도 저하,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 자동 도어록 이용 아파트 증가 등으로 조사 어려움 가중
- 가구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표본가구 대상기간을 6개월(1인 가구는 3개월)로 단축
- 불응가구 발생시 동일 조사구내 유사가구로 대체 허용
- 전자조사방식(전자가계부, 이메일조사 등) 도입 검토 등

□ 기타

- 답례품 지급: 월 약 2,000엔 상당의 답례품
- 가계조사 예산규모: 연간 약 10억엔(조사원 수당이 대종)
- 연간수입 조사와 저축 등 조사는 1장짜리 간단한 조사표에 응답자가 자기기입하여 비밀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는 방법 이용
 - 연간수입 조사는 소득계층별 지출통계 작성이 주 목적이며 이를 이용하여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하지는 않음
 - 소득분배지표는 5년주기로 조사하는 전국소비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
 - OECD에 제공하는 5년주기 소득분배지표는 후생노동성의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
- 고가내구재 구입비, 지역별 자료 등은 표본오차가 큼
 - 이용상 한계를 주지시키고, 주거 및 자동차 제외 소비동향지표 공표, 인근지역과 통합 또는 수년간 자료의 평균 등을 하여 분석할 것을 권고

- 농림어가 조사에서 영농목적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지출만 구분하여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표나 조사방법은 없고 조사원이 구분기입 지도
 - 단, 집계할 때, 다른 정보(영업면적 등)를 이용하여 비율 구분하는 방법을 일부 적용
- 지출분류에 COICOP분류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필요시 이용자가 재분류하여 이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
- LIS(Luxemburg Income Study) 회원가입 및 자료제공은 현행 통계법상 자료제공 제약(공익목적으로만 제공가능) 때문에 미가입
 - 단, 내년에 개정되는 통계법에 제공확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정 이후 가입 여부 검토 예정
 - 현재는 게이오대학교에서 자체조사한 패널조사 자료를 제공

(2) 가계소비상황조사

□ 도입 배경 및 연혁

- 2000년: 소비추이 파악방법 개선 위원회의 검토 및 제안
 - 총리지시로 총무청과 경제기획청의 공동연구 과정을 거쳐 도입
 - 구입단위 금액이 크고 구입빈도가 적어서 소규모샘플 조사인 가계조사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대규모 샘플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
 - 전반적인 소비추이를 파악하고 국민계정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 목적
 - 가계조사의 표본크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예산 과다소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하지 않음
- 2001년: IT관련 지출 및 단위금액이 큰 지출에 대한 파일럿 조사

- 2003년: 본조사 실시

□ 목적 및 이용

-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IT관련 지출과 단위금액이 크고 구입빈도가 적은 품목의 정확한 지출 파악
 - 조사대상 지출항목 선정에 위한 단위금액 크기 기준은 없으며, 구입빈도가 적고 표본오차가 큰 항목을 선정
- 가계조사와 결합하여 가계소비지수 작성, 고가품목 GDP추계 등에도 이용

□ 표본추출

- 3단 층화 추출: 500지역-3,000조사구-10조사가구
 - 표본규모는 30,000가구, 가구별 조사기간 1년, 매월 2,500가구 (30,000가구/12월)씩 연동교체

□ 조사방법 및 주기

- 정부의 기획-민간조사기관의 조사-정부의 집계 및 공표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인력으로는 새로운 조사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민간 위탁
 - 즉, 조사업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아님. 조사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됨에도 인력감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 조사표 회수방법: 가구에서 우편발송해 주는 방법과 조사원이 회수하는 방법 병행
- 응답자가 매일 직접 조사표를 기입하며 월별로 회수 및 집계
- 지출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월별, 분기별 및 연간으로 공표하고, IT 관련 지출에 대하여는 분기별 및 연간으로 공표

□ 조사내용

- 가구 특성
- IT관련 항목: IT관련 장비소유 및 서비스 이용, 인터넷 이용, 전자지폐 이용 등
- 고가이며 구입 빈도가 적은 지출항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계수지 항목, 기타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 지출항목: 방송 및 통신, 가구, 의류, 자동차 및 관련지출, 주거비, 가전제품, 의료비, 기타(교육비, 항공, 숙박, 패키지여행, 경조비, 타가구 송금 등)
- 가계 총지출
- 인터넷 거래 지출액

(3) 전국소비실태조사

□ 연혁 및 주기

- 1959년 이래 5년 주기로 조사, 최근 결과는 2004년 보고서이며 2009년 조사 기획 중임
- * 우리나라도 동일한 유형의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었으나 2000년 까지만 조사하고 폐지(가계수지에 대하여는 전국가구로 확대된 가계조사 통계를 활용하고, 자산부분에 대하여는 5년주기의 가계자산조사 도입)

□ 조사목적

- 가계수지, 구입처, 주요 내구재 보유, 주거, 저축 및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하여 가계수지 구조, 그의 지역 및 각종 가구특성별 차이 등을 분석
 - 가계조사는 월별조사로서 가계수지 추이 분석이 주 목적이며 표본규모가 9,000가구여서 세부적인 특성별 분석에는 한계

-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가구의 가계여건, IT 및 인터넷 발달에 따른 관련 환경에서의 가계지출 등 파악도 주요 목적

□ 표본추출

- 680개 도시 및 458개 소지역-4,531개 조사구역-12개 조사가구
- 전체 약 60,000 가구
 - 지역별 세부자료 작성을 위한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가계조사의 확대판
- 모니터조사 도입 검토
 - 민간리서치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표본(유의표본)을 이용하는 방법
 - 조사협조도가 높고 가구특성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이점

□ 조사내용

- 소득: 근로자 및 무직가구 대상으로 월천별 금액조사
- 지출: 전가구 대상으로 품목별로 목적, 지급방법 및 구입처별 지출금액 조사
- 40개 내구재 보유 현황, 이중 20개에 대한 구입시기 조사
- 연간소득: 지난 1년간 가구구성원의 유형별 소득금액 조사
- 저축 및 부채: 저축, 보험, 주식, 채권, 각종 목적별 부채 등
- 가구 특성: 가구주 연령, 직업, 가구원수, 취업인원수 등
- 주거: 주택구조, 주택 및 대지 면적, 건물유형, 소유상태, 설비, 임대료수입, 건축연도 등

□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기간

- 3개월간 소득 및 지출에 대하여 가계부 조사
- 기타 내구재, 연간수입, 저축부채, 가구특성, 주거 등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표에 의한 조사

□ 보고서

- 9권의 보고서 발간: 1. 소득과 지출, 2. 품목별 지출, 3. 구입처별 지출, 4. 주요 내구재 및 저축부채, 5. 가구분포, 6. 주요 특성별 가구, 7. 고령자 가구, 8. 가계자산, 9. 시계열자료 등

시 사 점

- 소규모(9,000가구) 표본조사인 가계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조사 도입
 - 지역별 세부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한 60,000가구 표본의 5년 주기 전국소비실태조사 지속
 - 고가 내구재 소비 등의 정확한 자료작성이 가능한 30,000가구 표본의 월주기 가계소비상황조사 도입
- 가계조사결과의 다양한 활용
 - 가계수지의 규모, 구조 등 이외에 월별 계절조정 가계소비지수를 작성하여 경기분석을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
 - 표본오차가 큰 문제가 있는 지역별자료를 집계하여 공표하며, 정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수년간 평균, 인근지역과 통합 등을 하여 이용할 것을 권고

다. 2010 인구센서스(국세조사)

□ 주요내용

- 조사시점: 1920년이후 10월1일 오전 영시(이하 “조사시”)
- 제18차 간이조사로(2차해) 17개 항목 조사
 - 남녀, 연령, 배우관계 등 인구의 기본적 속성에만 한정
- 조사체계: 총무성 통계국 → 도도부현(1도, 1도 2부, 43현)
→ 시정촌 → 지도원 → 조사원
- 조사구 설정: 1개조사구에 50세대 정도
- 국세조사(센서스) 실시 조사 환경 변화 나타남
 - 국민들의 의식 변화
 - 국세조사(센서스)를 둘러싼 주요 사회경제적 변화
: 급속한 고령화 및 출산력 감소, 지역불균형 분포
 - 부재가구의 증가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비협조 가구(정부에 대한 불신 및 무관심 증가)
 - 부재가구를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2005년 조사에서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
- 생활환경 및 주거형태의 다양화
- 조사원: 약 83만명

□ 2010 일본 국세조사(센서스) 준비 상황

- 새로운 조사방법인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도입 준비
 - 시험조사를 통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가능성 검토
 - 제1차 시험조사에서는 세대가 조사표에 기입한 내용에 대해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검토 미실시
(총 18,322가구중 기입미비가 없는 세대는 21.7% 불가)

-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 연구(우편조사, 인터넷)
- 시험조사시 조사구별로 기입 방법이 다른 2종류의 OCR (광학식 문자판독) 조사표(갑/을)를 이용
- 우편, 인터넷, 조사원을 통한 제출 원칙

※ 2010년 국세조사(센서스) 1차 시험조사 결과 분석

합 계	합 계				당초 회수				팔로우업 회수				미회수
	합 계	우송 제출	조사원 회수	시구청 직접제출	합 계	우송 제출	조사원 회수	시구청 직접제출	합 계	우송 제출	조사원 회수	시구청 직접제출	
23,748 (100.0)	18,392 (77.4)	16,588 (59.9)	1,360 (5.8)	404 (1.7)	15,100 (63.6)	14,530 (61.2)	221 (0.5)	349 (1.6)	3,261 (13.7)	2,058 (8.7)	1,148 (4.8)	55 (0.2)	5,356 (22.5)

< 우편조사 회수율 높은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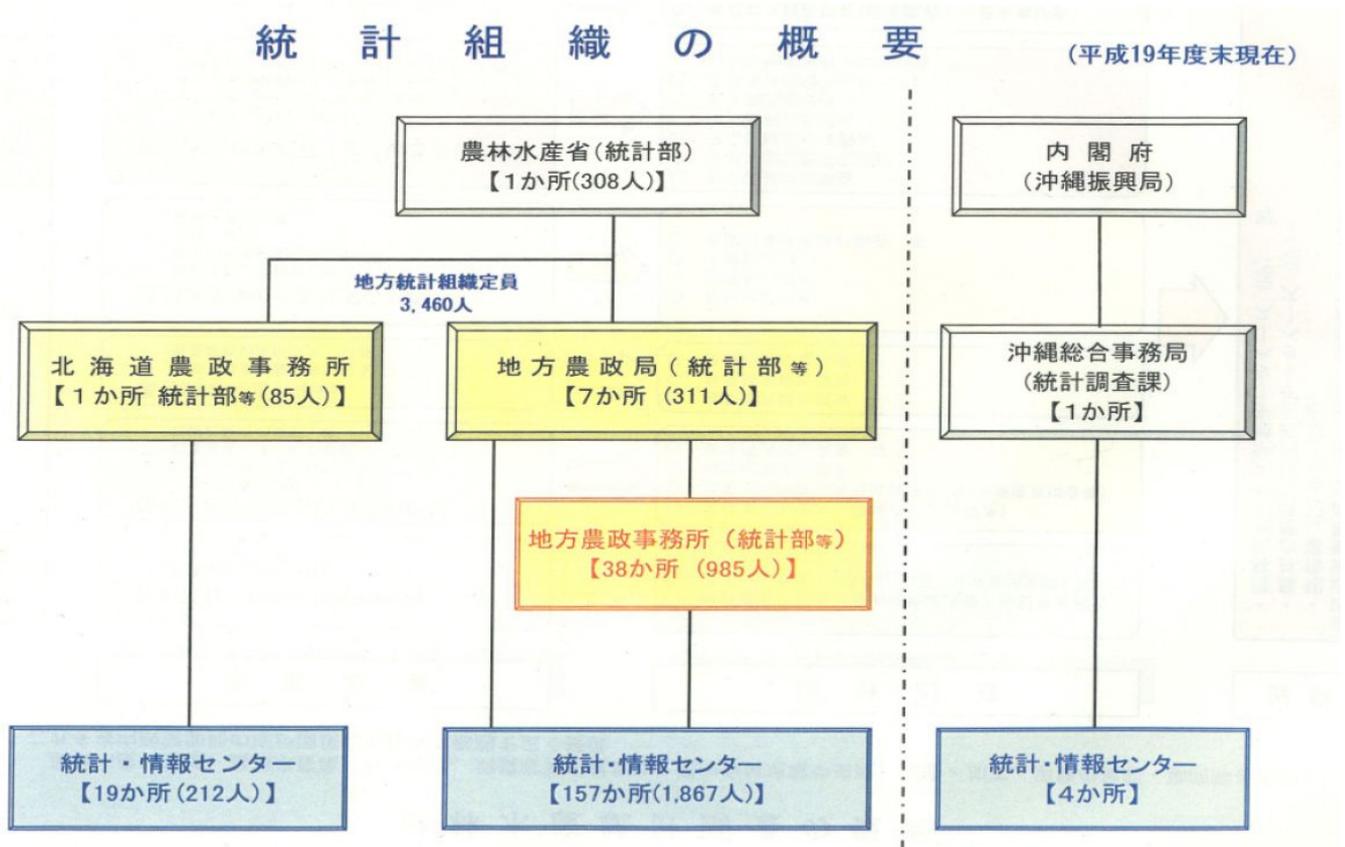
- 개인 프라이버시 작용
- 개인정보법 적용으로 면접조사 기피
- 기존 국세조사(센서스) 방식이 조사표를 배부하여 조사원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조사표 회수방식이 우편조사에 작용

□ 2010 국세조사(센서스) 추진 방향

- 2010 국세조사(센서스)는 등록자료에 기반한 센서스 가 아닌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시 예정
 - 국세조사(센서스) 비용 측면에서 미국의 1/10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 고비용 국세조사(센서스) 의식 없음
 - 1인당 센서스 비용: 미국(50,000원), 일본(6,000원), 한국(4,300원)
 - 전통적인 조사방식은 여전히 일본에서는 효과적인 조사 방법으로 인식
 - 최근의 이용 가능한 행정자료는 현장 조사방식(전통적 방식)으로 조사한 인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

- 행정자료는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 이상적인 장점이 있으나, 행정자료가 이름이나, 생일, 성과 주소정도로 제한하고 정상적인 센서스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인식
- 전수조사인 국세조사(센서스)를 기반으로 통계체계 전체의 합리적인 정비가 가능
(모집단들에 근거 표본조사의 정확한 실시, 소지역 등 상세한 데이터 제공)
- 새로운 센서스 방법 이행 및 차기센서스 플랜 구축을 위한 팀 구성
- 국세조사(센서스) 관련기관(지자체, 아파트경비업체, 기타 센서스 단체)을 통합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차기센서스 관련 합의 도출

라. 일본 농수산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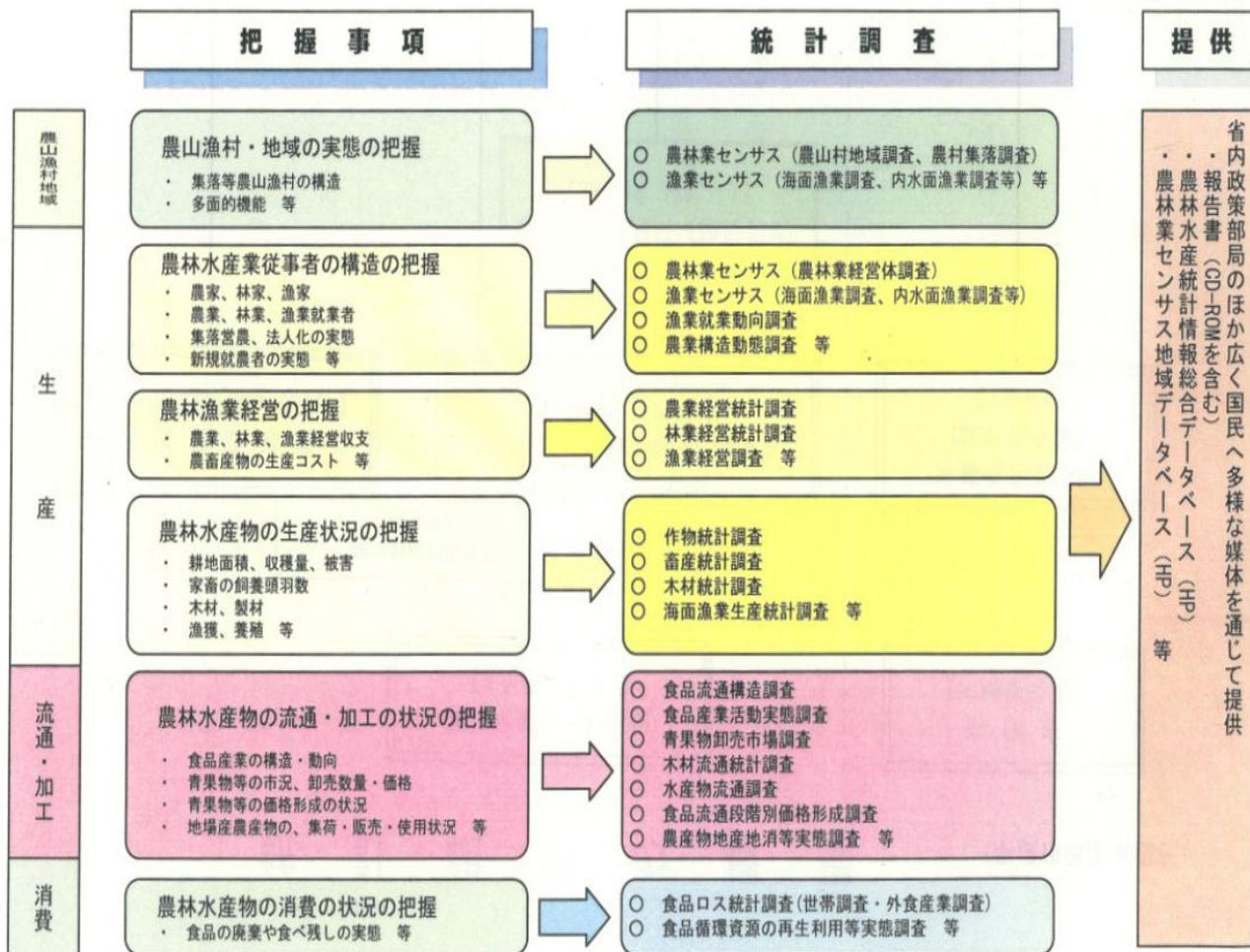


- 농림수산성 통계부(국장급)는 대신관방 직할로 설치
 - 관리과, 통계기획과, 시스템 관리실, 경영구조 통계과, 센서스 통계실, 생산유통 소비통계과, 소비통계실 등 7개과 308명으로 구성

- 현장 업무는 지자체와 별도로 설치된 지방농정국과 그 산하의 통계정보센터를 통해 현장업무를 수행
 - 농림어업 센서스는 지자체의 통계과를 통해 수행
 - 2007년 말 현재 3,460여명이 농림수산통계의 현장 조사업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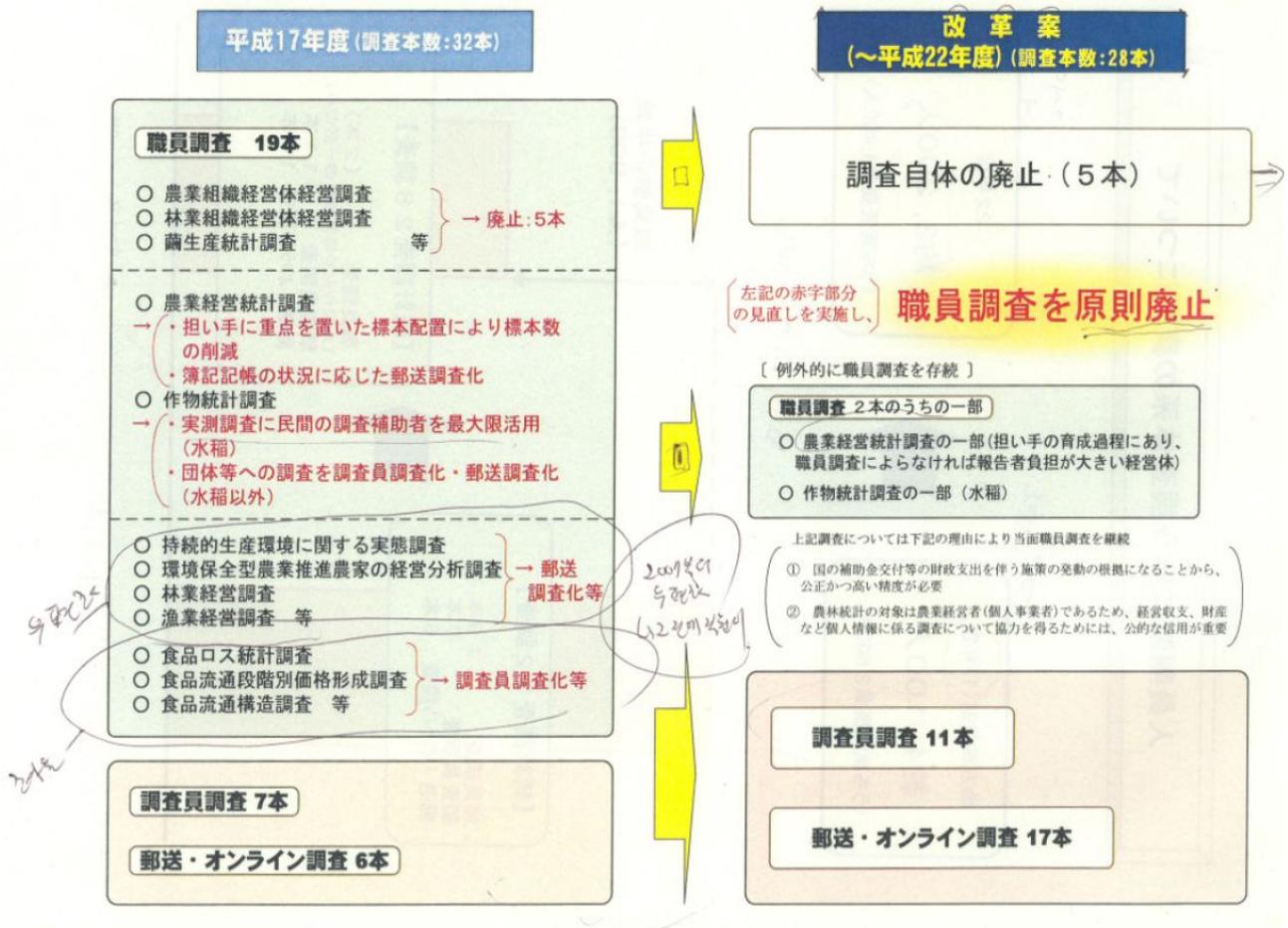
農 林 水 産 統 計 調 査 の 概 要

農林水産省では、農林水産業、関連産業、消費者等を対象に、農山漁村地域や生産、流通・加工、消費の実態・動向等を把握し、これを省内政策部局のほか国民にも様々な形態で広く提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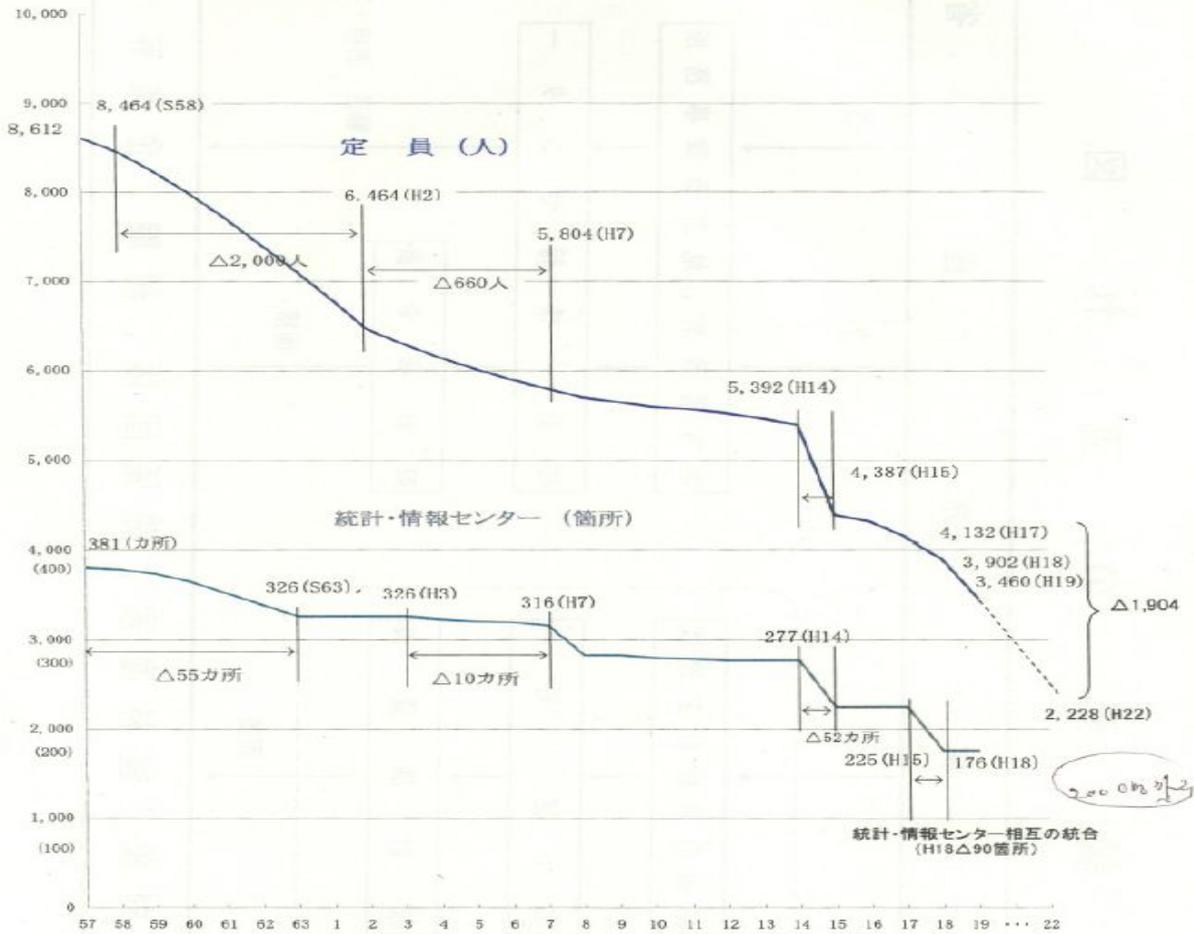
- 최근 농산어촌의 지역조사를 중시하며,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 상황을 파악하는 통계가 다양하게 있음
 - 식품 유통구조조사, 식품산업활동 실태조사, 청과물 도매시장조사, 목재유통통계조사, 수산물 유통조사,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등
 - ⇒ 동 통계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야하는 분야로서 별도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작물생산량 통계의 비중은 매우 작으며, 농림어업경영 통계조사는 최근 일정 규모이상의 경영체 중심으로 변화

農林水産統計の改革



-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 5종의 통계조사 폐지
 - 농업조직경영체경영조사, 임업조직경영체경영조사, 누에생산통계조사 등
-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정규 공무원이 하지 않고, 임시조사원이나 민간위탁으로 추진
 - 다만, 농가의 프라이버시와 직관되거나, 국가 신용기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는 통계는 계속 직원이 조사 (농업경영통계조사, 작물통계조사)
- ('05년) 직원조사 19종, 임시 조사원조사 7종, 우편·인터넷조사 6종 ⇒ (10년) 직원 2종 중 일부, 조사원조사 11종, 우편·인터넷조사 17종

地方統計組織の定員及び統計・情報センター数の推移



2005년 이후
 5,000명

- 1983년도의 8,464명에서 2010년까지 3차례 이상의 대폭 감축을 거쳐 2,228명으로 축소 계획
 - 1983~1990 : $\Delta 2,000$ 인, 2002~2003 : $\Delta 1,000$ 인, 2005~2010 : $\Delta 1904$ 인
 - 최근 2005년 이후의 공무원 감축은 전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 슬림화 계획의 일환임
- 현장조사를 위한 최하위 조직인 통계정보센터의 경우도 1983년의 381개소에서 현재 176개로 감소($\Delta 54.0\%$)

시사점

- 농림수산업성 통계부에서 농수산통계의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지방 인력 대폭 감축할 계획이나, 감축인력은 지방농정국의 타부서로 진출
 - ⇒ 우리나라의 초과현원과는 다소 상이
 - 대부분의 통계조사를 임시조사원에 의하거나 민간위탁을 하고, 조사항목을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통계는 폐지 방향으로 추진
 - ⇒ 우리의 경우도 농수산통계 통합정비를 통해 조사 종류를 최소화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나, 조사항목 간소화는 아직 미흡

-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매우 미약하지만 농수산통계의 조사대상이 농산어촌에 넓게 산재해 있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아직도 타 분야에 비해 다소 많은 인력 및 통계가 존재

□ 2010 일본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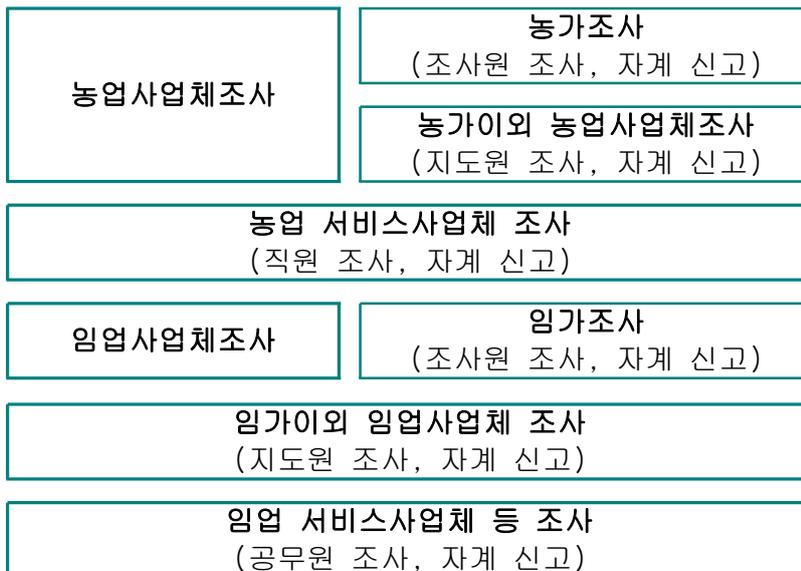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개선사항

1. 농림업경영체조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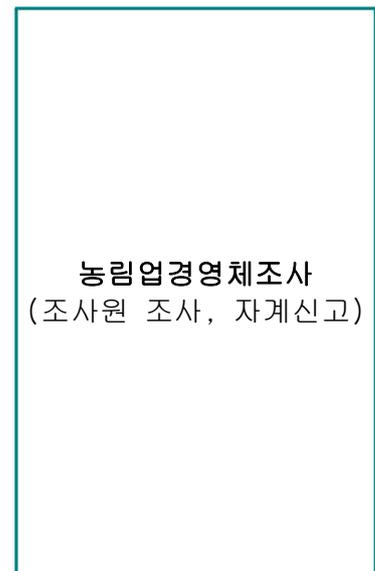
1) 조사 개요

- 가구·세대 관점에서 농림업 생산 및 경영관점으로 전환
- 농업부문 3개 조사, 임업부문 3개 조사를 통합하여 농림업경영체조사 도입
- 10년 주기로 조사하던 임업총조사를 5년 주기의 농업총조사와 통합
- 응답자 부담감소를 위해 조사항목 간소화
 - 농기계 조작 가구원·수원지 경영경지 면적내역 삭제, 가족경영협정·계약 생산·친환경농업·벼농사 이외 농업위탁 항목 등 간소화
- 전면적인 자계식 기입방법 채택
 - 조사원이 조사대상 경영체에 조사표 배부, 제출 조사표 심사, 불완전조사표 재조사

< 2000년 >



< 200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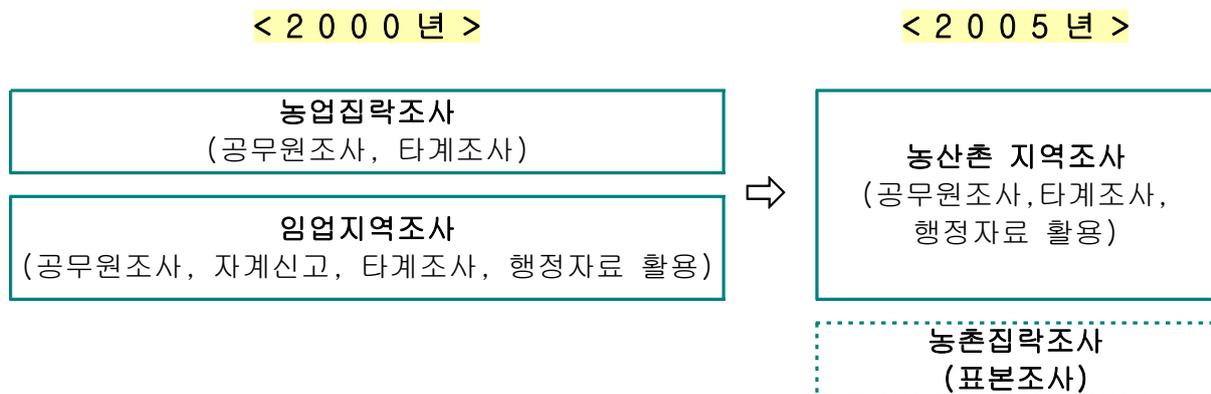


2) 농가·임가와 농림업경영체 구분

- 농가에서 농림업경영체를 구분하고, 기준미달 농림가는 농림업경영체 조사 대상(후보)명부만 작성
- 농림업경영체 기준
 - 경영 경지면적 30a 이상 농가
 -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사육두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
 - 경영 산림면적 3ha 이상의 육림업 및 벌목업 영위 임가
- 농림업경영체 대상(후보)명부 항목
 - 기본사항(경영체 명칭, 연락처, 주소 등)
 - 토지 보유현황(소유지, 임차지, 경영지), 보유 산림면적, 판매금액
 - 생산자조직 가입현황·사업의 종류
 - 농림업경영체 요건 충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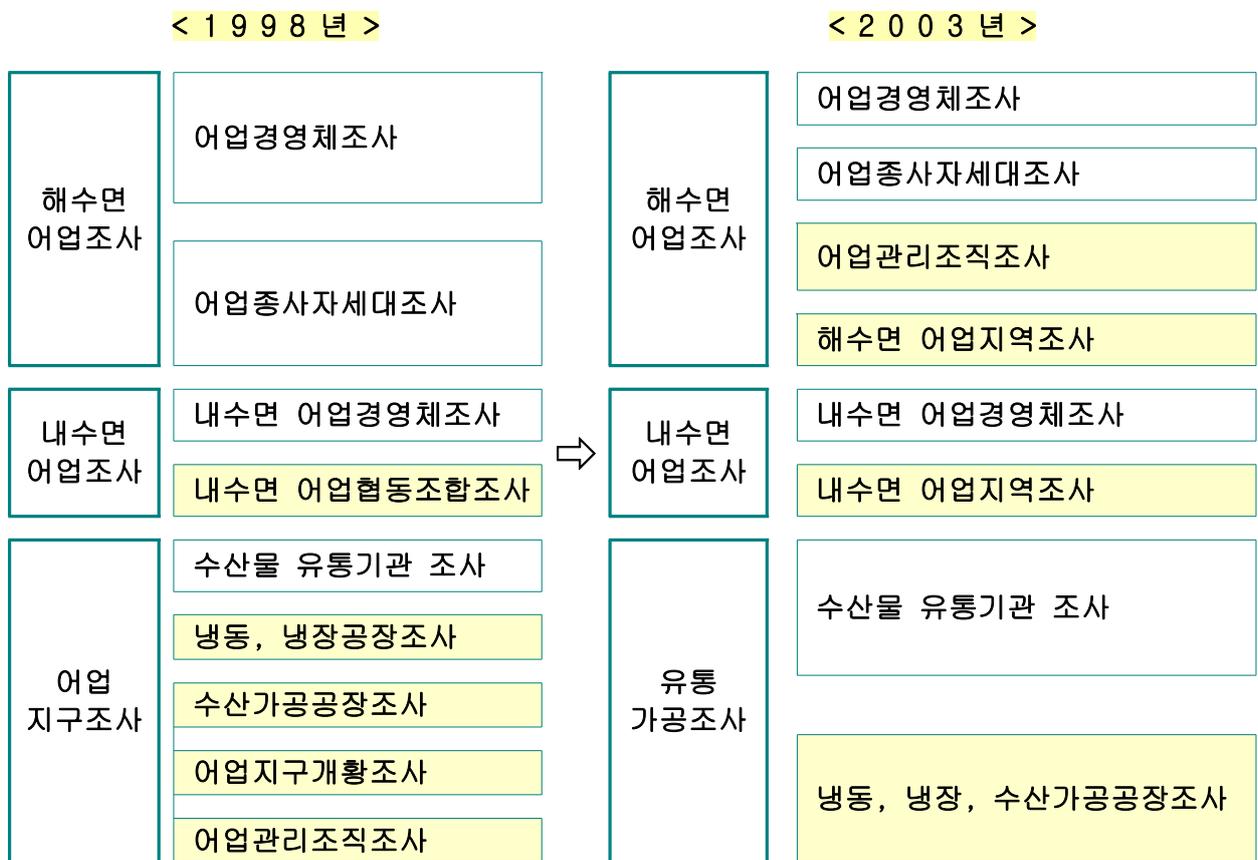
2. 농산촌 지역조사 도입

- 농업집락조사와 임업지역조사를 통합하여 농산촌지역조사 실시, 집락 특성항목은 부가조사(표본)로 농촌집락조사에서 조사
 - * 농촌집락 : 읍면동 구역의 일부에 농업상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촌락공동체 개념이며, 총조사의 조사구설정 단위
- 담당직원이 시구정촌에 대해 면접조사 실시, 산림조합·산림청·읍면동 행정자료로 보완



3. 해수면어업 지역조사 및 내수면어업 지역조사 신설

- 어업지구개황조사, 내수면 어업협동조합조사를 폐지하고, 해수면어업 지역 및 내수면어업 지역조사 신설
- 유통가공조사에서 냉동·냉장공장조사와 수산가공공장조사를 통합
- 어업경영체조사 대상처 중 관공서·학교·시험장, 유통가공조사는 전면 자체 신고조사로 실시



* 어업관리조직 : 어장 또는 어업종류를 같이하는 복수의 어업경영체로 된 조직, 자주적인 어업자원관리, 어장관리, 어획관리 시행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추진 방향

1. 농림수산통계의 전면적인 재구축

○ 재구축 취지

- 정부조직개편(4,132명→2,228명)에 대응하여, 경영소득 안정대책 등 농정의 중요 과제에 인적자원을 집중화, 위탁처리제(outsourcing) 도입

○ 농림수산통계의 재구축

- 작성중인 통계조사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 농림수산통계의 새로운 틀 구축
- 농림수산통계 전체 **33종** 중 통계조사 **5종** 폐지, 조사표 삭감 **30종**, 조사항목 삭감 **29종**, 조사주기 변경 **12종**

2. 2010 농림어업총조사 추진방향

○ 조사 수행방법 개선

- 고양된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따라 작성 조사표류에 대해 우편회수 등 조사 수행방법 개선 검토

○ 조사항목 개선 및 재검토

- 농림업 기본구조 파악에 주력하고, 조사항목 활용도 평가를 거쳐 조사항목의 대폭적인 감량 추진('05년 375개 ⇨ '10년 202개)
 - * 가족경영협정, 복식부기의 기장, 녹색신고, 농작업 위탁 항목 폐지
- 농산촌지역조사는 조사원의 직접조사가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하며, 총조사 부가조사로 실시한 **농촌집락조사**는 폐지
- 농업이외 산업에서의 자본금, 출자금 유입 상황, 농산촌 전체 가구수, 조합 구성 및 활동상황 등 신규 조사

○ 지역 데이터베이스의 충실화

- 2005년 조사자료와의 연계, 대국민 서비스방법 개선 등

○ 농림업총조사 자료의 연속성 확보

- 농림업경영체조사의 계속적 수행과 함께, 과거 총조사의 가구 중심 자료와의 연속성 확보방안 모색

3. 2008 어업총조사 추진방향

○ 어업임금종사자세대조사 폐지

-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 등으로 명부작성의 어려움에 봉착
- 어업경영체조사에서 연령별, 성별 피용자 규모를 일원화하여 조사
 - * 종래에는 어업경영체조사의 피용자와 어업임금종사자세대조사로 이원화

○ 어업관리조직조사, 해수면 어업 지역조사, 내수면 어업 지역조사는 수협에서 일원적으로 조사, 수산물 도매업자·수산물 매수인 조사는 폐지하고 수산시장만 조사

○ 조사방법의 개선

- 고양된 개인정보 보호의식에 맞춰, 조사원 면접조사를 자계 신고조사로 전환, 조사표 봉입 회수·우편회수 도입

○ 조사항목 개선 및 재검토

- 농림업총조사와 동일하게 조사항목 대폭적인 간소화 및 폐지
 - * 어선명·마력수·승선원수 삭제, 최성어기 종사자수·육상작업 종사자수·어선 및 어망 소유형태·수익 분배 등 폐지
- 참치양식, 경영 다각화(낚시안내·어가 민박이용자 등) 등 신규조사

마. 아이치현 통계활동현황

□ 아이치현의 행정기구

- 지사, 부지사, 8부 8국 866과 19실
- 112개 지방기관, 교통국, 의회사무국, 각종 위원회 등

□ 아이치현 통계조직

- 통계업무는 현민생활부 통계과에서 담당
- 통계과 조직 및 분장 사무
 - 과장이하 직원 84명
 - 기획·조정담당(9명), 인구·노동력통계(10명), 물가·소비통계(7명), 학교·농림통계(5명), 노동·사업체통계(7명), 공업통계(6명), 생산동태통계(6명), 상업통계(6명), 분석·경제통계(8명), 자료·보급(9명)
- 통계과 분장사무
 - 국가의 지정통계조사, 아이치현의 통계조사, 통계의 가공 및 분석, 통계정보의 이용촉진, 통계자료의 편집·발행, 통계조사 사무의 연락조정, 시정촌 통계조사 사무의 지도, 통계사상의 보급·개발을 담당
- 국가와 현의 통계업무 연관성에 대해
 - 통계과에는 통계 전임직원을 배치(총무성이 배치정원수 결정)
 - 현의 통계과는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소관 하는 지정통계조사에 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

- 해당 성·청에서 조사비용예산 지원
- 현의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자체 통계조사는 없음
 - 지정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소득 등 지역통계생산
 - ※ 전국표본을 그대로 적용 : 통계의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음
- 인건비 등을 “통계조사사무 지방공공단체위탁비 취급요강”에 의해 교부
 - 총무성에서 조사량 등 업무량에 따라 인건비 예산 지원(전체예산 86%)